

#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3곳 설립

### 카이바이오텍·알앤오식품·이인자에프앤비... 이밖에 30여 곳과 설립타당성 검토 중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인 '연구소기업'이 전북특구내 동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지역 산업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해줄 것이 기대된다.

특히 이들 기업은 전북특구 밖의 자본과 기술로 투자된 기업들이 전북특구로 모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구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지난 5월 기준 (주)카이바이오텍, (주)알앤오식품, (주)이인자에프앤비 등 3개사다.

이들 기업은 각각 서울, 세종, 인천 소재 기업들이 도내 산·학·연 합작 투자방식으로 전북특구의 장점을 살려 전북지역내 설립됨으로써 지역 산업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을 통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내 설립된 기업이다.

연구소기업 신청 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등록요건을 검토해 승인하면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만의 차별화된 제도로, 공공기술과 민간자본이 결합해 기술창업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도와 전북특구본부는 이런 '연구소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MicroRNA



창업 활성화 포럼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효성이 주관하여 20일 부안 모항 해누리가족호텔에서 열린 창업 활성화 포럼에 이형규 정부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창업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있다.

를 이용한 바이오마커 기술 등 38개의 출자가능 기술을 발굴하고, 이 중 30여개 기술을 수요기업과 연계해서 연구소기업 설립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특화분야별로는 농생명 융합분야 18건(47.4%), 융복합 소재·부품 17건(44.7%), 기타 3건(7.9%), 지역별로는 전북내 22건(57.9%), 전북외 16건(42.1%), 설립주체별로 대학은 29건(76.3%), 출연(연) 등 9건(23.7%)이 다.

도는 이런 짧은 기간 내 다양한 기술발굴이 가능했던 이유로 전북특구본부가 지난 4월, 6개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북특구의 특화분야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찾아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출자 후보기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화할 수요기업 발굴을 병행하고 입주공간 정보제공 및 지원 등으로 특화분야 초기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을 성공요인으로 내세웠

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전북특구가 특화분야의 연구소기업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내 전북특구 10호 연구소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신원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의 기술뿐만 아니라 전북 외 기술을 가지고 도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안한다

### 4월 판매 전월 대비 6.4% 감소... '약발' 떨어져

지난해 하반기 시작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이 예정대로 종료한다.

2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예전부터 공언했던대로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또 한번 연장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연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개소세가 인화된 후 자동차 업계는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잘 나가던 자동차 판매는 개소세 인화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1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개소세 인화가 종료되면 다시 한번 소비절벽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개소세 인하 연장

이 포함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소세 인화가 연장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승용차 판매는 개소세가 인화된 상태에서 전월 대비 6.4% 감소했다. 이미 '약발'은 떨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말을 뒤집으면서까지 연말까지 세금을 더 인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효과적인 소비진작책이긴 하지만 최근 1년간 세금을 깎아줬다면 살 사람은 진작에 샀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정영수 기자

##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 군무원·경찰·지방직 응시 지원

### 권익위, 사이버 테러 위협 대비 위해 개선안 마련

앞으로 군무원이나 경찰, 지방직 공무원 응시 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보안 전문가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격증은 군무원이나 경찰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응시 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공직 임용 기회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21건 접수됐다고 한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등 채용 시험 응시 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 지난해 농가소득 3721만원... 6.5% 상승

### 농가경제조사 결과... 도농간 소득격차 2012년 57.6% → 2015년 64.4%로 개선

지난해 농가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3721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도농간 소득격차 비율도 64.4%까지 상승하며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간 소득격차 비율은 2012년 57.6%였으나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농사활동의 직접 소득인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해 농가소득 증가세를 견인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개선돼 30.2%를 기록했다.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의 경우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1.2%로 늘어났다.

농업 이외의 숙박, 가공업 등의 사업소득과 직장 근무 등 사업외소득을 포함하는 농외소득의 경우 지난해 전체 농가 소득의 40.1%를 차지했다.

지난해 농외소득은 그러나 1494만원으로 전년도 1480만원에서 0.9%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규모화된 전업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면적 2.0ha 이상, 40~50대 전업농가의 농가소득은 790만원이 증가한 678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상승해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들 농가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업정책금리 인하(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3.0%에서 1.8~2.5%로 인하),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부의 직불금 지원 등 공적보조지원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공적보조금 가운데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포함된 농업외보조금 증가

가 전년 대비 21.0% 상승했다.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최대 32만 6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반면 고령화된 영세 농가에서는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농가의 이전소득 비중은 31.6%로 높은 가운데 공적보조금 가운데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해 정부의 복지지원정책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소득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개선, ICT 스마트팜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농지연금 등 정부 복지지원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응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응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